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10여개 비쟁점법 이번주 처리

28일 본회의…尹 거부한 '방송4법'·'전국민 지원법' 등 재표결 가능성

여야가 오는 28일 민생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비쟁점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상임위 논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10여개 민생 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올린 법안은 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가 전망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위에서 의결을 마쳤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야당에서도 다수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의결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등을 통과시킨 상태다.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이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및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복지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들 민생법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통화에서 "여야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정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이 상정되면 모두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치에 상임위 파행 계속

법사위·과방위, 청문회 등 대립 첨예…기재위 등 소위 구성도 안돼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청문회 등으로 어수선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지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기간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전부다.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정쟁이 극심한 상임위 중 하나다. 과방위는 현재까지 모든 상임위 중 가장 많은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주를 이뤘다.

이 사이에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방송 4법' 뿐이다.

이 때문에 과방위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방송 현안만 다루느라 과학기술, 원자력과 관련한 법안 처리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 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참석 범위를 놓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며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

민주 "윤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지하철 역 등 독도 조형물 철거, '노후 됐다' 핑계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표현하는 등 일관되게 독도 지우기에 애써 왔다"며 "이 대표는 이번 조형물 철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쟁기념관에서 2012년부터 전시됐던 독도 축소 모형이 지난 6월 철거됐으며, 논란이 벌어지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지방 공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

문금주,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5일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